

현대 철학으로서의 짜다카와 한국 사회의 함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안승훈 서울대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the conflict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hrough the Jewish charitable tradition of Tzedakah and applying its principles to Korean society. Tzedakah is not merely charity but “righteous giving,” understood not as an individual choice but as an obligation of community members. It is an ethical system that simultaneously demands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responsibility.

Liberalism emphasizes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yet it can lead to the weakening of community and the emergence of a moral vacuum. Communitarianism, on the other hand, values solidarity and the common good but risks restricting individual autonomy. Tzedakah functions as an ethical mediator that alleviates this tension and enables a balance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articular, Tzedakah transforms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into a moral obligation, emphasizes human dignity and self-reliance, and strengthens communal solidarity.

Meanwhil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harmoniously integrating traditional collectivism with modern individualism. As a result, individualism has often been distorted into selfishness, while communitarianism has taken the form of exclusionary group collectivism. Consequently, problems such as the weakening of public consciousness, declining social trust, and collective selfishness have emerged.

In this context, Tzedakah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First, by promoting a culture in which giving is recognized not as a choice but as a civic duty, sharing can become part of everyday life. Second, strengthe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an contribute to alleviating economic inequality. Third, customized welfare system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can help address blind spots in social welfare. Fourth, revitalizing community-centered local networks can restore social solidarity and trust.

In conclusion, Tzedakah, as an ethic that integrates individual freedom with communal responsibility, can serve as a meaningful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ource for alleviat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Korean society and fostering a more mature form of democracy.

Key Words: Tzedakah, Individualism, Communitarianism, Jewish Tradition, Charity

I. 서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의 연대와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 두 가치는 상호 보완적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충돌하며 사회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될 때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공동체의 약화가 발생하고, 반대로 공동체의 가치가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본 연구는 유대 전통의 윤리 개념인 '쩌다카(Tzedakah)'에 주목한다. 찰다카는 단순한 자선이나 기부를 넘어 '정의로운 나눔'을 의미하며,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 이해된다. 찰다카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독특한 윤리 체계로서,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두 사상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공동체 해체의 문제를 고려할 때, 찰다카가 제시하는 '의무로서의 나눔'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철학으로서의 찰다카를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함의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찰다카의 어원과 사회 공동체적 의미

1. 어원과 의미

찰다카는 히브리어로 '정의'를 뜻하는 '체데크(צֶדֶק, tzedek)'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유대 전통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단순한 자선(charity)을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도덕적 의무이다(Sacks 2005, 135). 유대교 전통에서 찰다카는 이웃에 대한 나눔을 선택적 선행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의로운 책임으로 인식한다(Orogun 2022, 3; Donin 1972, 138). 히브리어 성경에서 찰다카는 '정의', '공정성', '자선'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정직성, 인간 재판관의 정의로운 판결, 개인의 도덕적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행동을 모두 아우른다(이원재 2025, 4-9). 이처럼 찰다카는 하나님의 본성, 인간의 도덕성, 공동체적 책임, 구원의 약속을 통합하는 신학적·윤리적 개념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2. 사회 책임과 정의 실현

찰다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과 사회적 책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윤리적 명령이다. 신명기 24:13은 가난한 자에게 담보물을 돌려주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로 간주하며, 신명기 15장은 경제적 재분배를 찰다카로 규정하

고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가 명확한 언약적 의무임을 선언한다. 이삭줍기 법(레위기 19:9-10), 안식년과 희년법(레위기 25장),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신명기 14:28-29) 등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당된 권리'로서의 켜다카를 전제로 한다. 이는 현대의 임의적 자선 개념과 달리,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 의무이자 공동체 지속의 필수 요건이다. 예언자들 역시 자선 없는 종교적 제사를 비판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강조했다. 이사야의 선포처럼 켜다카는 사회 구조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구체적 방식이다.

3. 현대 사회 공동체적 의미와 역할

켄다카는 현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적 함의를 다층적으로 내포한다. 첫째, 켄다카는 정의 실현의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다. 유대 사상에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인식하며, 빈자를 돕는 것은 재산을 사회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공의의 실천으로 이해된다(Sherzer et al. 2024, 28). 둘째, 켄다카는 인간 존엄의 존중과 자립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마이모니데스(Maimonides)가 지적했듯, 가장 고귀한 켄다카는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인간 존엄을 핵심으로 삼는 현대 복지의 지향점과 일치한다(Ruddick 2010, 93-95). 셋째, 켄다카는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회윤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전통적 유대 공동체의 '가바이 켄다카'(Gabbai Tzedakah) 제도처럼, 켄다카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복지에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현대에도 자선 단체, 비영리 조직,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이 켄다카의 현대적 구현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증진시킬 잠재력을 지닌다(Putnam 2000, 148-152).

III.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 대립, 상호 보완

1. 자유주의의 핵심 개념

현대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Rawls 1993, 53). 사회계약론 전통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역할에 제한되어야 한다. 롤즈(Rawls)는 모든 개인이 침해될 수 없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지니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취약 계층의 이익을 증진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국가 재분배 최소화를 주장하는 반면, 복지적 자유주의자들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통해 자유의 실질적 향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국가는 가치중립적 심판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Rawls 1993, 190).

2. 공동체주의의 핵심 개념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존재로 이해하며, 1980년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되었다. 샌델(Sandel)은 롤즈의 개인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판하며, 실제 인간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얽매인 자아(bound self)'라고 주장했다(Sandel 1982, 143). 매킨타이어(MacIntyre)는 공동의 도덕 전통 상실이 도덕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덕 윤리의 부활을 역설했다. 월처(Walzer)는 각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에 뿌리내린 다원적 정의관을 제시했다. 공동체주의는 가족, 이웃, 시민단체 등 중간 공동체의 활성화와 시민 덕성의 함양을 통해 사회적 원지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Etzioni 1993, 251). 다만 과도한 공동체 강조는 소수의 권리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3. 대립과 상호 보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가치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오랜 철학적 갈등을 빚어왔다. 개인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기주의와 사회적 무관심이 팽배해지고, 반대로 공동체 이익만을 앞세울 경우 개인의 다양성이 억눌린다(Putnam 2000, 275).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치오니(Etzioni)는 "권리 없이는 책임도 없고, 책임 없이는 권리도 없다"는 '반응적 공동체주의(responsive communitarianism)'를 제창하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호 보완을 모색했다(Etzioni 1993, 4). 롤즈 역시 후기 저작 『Political Liberalism』에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겹치는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통해 공동의 정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Rawls 1993, 164).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두 사상이 상호 배타적 대립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보완적 요소임을 인식하며, 성숙한 민주사회란 개인의 권리 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라고 본다(이범웅 2004, 76).

IV. 켄다가를 통한 자유주의 한계의 보완과 정책적 제안

1. 도덕적 책임 의식 및 구조적 불평등 보완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법적 의무만 이행하면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은 각자의 자율에 맡겨지므로, 도덕적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Etzioni 1993, 39). 켄다가는 법을 초월한 도덕적 의무감을 부여함으로써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Sacks 2005, 47). 또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고착되기 쉬운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켄다가의 십일조 전통에서 비롯된 윤리적 재분배 문화는 민간 차원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Walzer 1983, 18). 장학재단, 무료 진료소, 푸드뱅크 등에 대한 부유층의 기부 확대는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며, 공적 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2. 공동체 의식 약화 및 관료적 복지 한계 보완

도시화·산업화로 약화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켄다카의 윤리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퍼트남(Putnam)이 지적했듯 활발한 시민 참여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좌우하며, 켄다카 문화는 이러한 참여를 도덕적 의무감으로 뒷받침한다(Putnam 2000, 276).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적 복지는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켄다카적 민간 자선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다 개인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인간적 교감을 통해 수혜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효과를 지닌다(Sherzer et al. 2005, 23-26).

3. 자발적 기부 의존의 불안정성 보완

민간 기부에 의존할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급변할 수 있다는 취약성이 있다(Hamers et al. 2005, 311). 켄다카는 기부를 '도덕적 의무'로 승화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한다. 전통적 유대 공동체처럼 정기적 공동 기금 적립 문화를 현대에 구현하고, 개인과 기업이 일정 비율을 꾸준히 기부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민간 복지 재원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Ismail 2009, 204). 정부가 기부 문화 확산과 제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나눔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켄다카의 정신은 자선을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불확실한 행위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 책무로 격상시킬 수 있다(Orogun 2022, 15).

4.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켄다카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Orogun 2022, 18). 첫째, 윤리적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화로서 세제 혜택 강화, 기부금 매칭 펀드 구축,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기반 복지를 강화하여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협력하는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주민 참여 예산제, 공론화위원회 등 직접 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봉사 활동을 제도화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Etzioni 1993, 90). 켄다카 정신의 제도화는 자유주의의 기반 위에 윤리적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심어, 민주주의의 성숙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경로이다.

V. 민주주의와 켄다카의 역할

켄다카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도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여한다. (1)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분배 정의—극심한 부의 편중은 '한 사람, 한 표' 원칙을 훼손하고 빈곤층의 체제 불신을 심화시킨다(Putnam 2000, 375). 켄다카의 적극적 실천은 취약 계층도 최소한의 존엄과 기회를 보장받아

민주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도덕 합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2) 공동체 연대 강화와 사회 통합— 활발한 기부와 봉사 문화가 정착된 공동체는 구성원 간 소속감과 상호 책임감이 높으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완충 역할을 하여 극단적 분열을 막아준다(Putnam 2000, 150-158). 켄다카와 같은 보편적 도덕 가치를 공유할 때 인종·종교·이념을 초월한 공통의 시민 정체성이 형성된다. (3) 자유주의-공동체주의 가치의 정책적 통합— 복지 분야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 경제 분야에서 시장 원리와 도덕적 재분배의 상호 보완, 정치 분야에서 제도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의 병행이라는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이 가능하다(Hamers et al. 2005, 311). 켄다카의 철학과 실천은 자유민주주의 내부에서 양립하기 어려웠던 가치들을 연결하고,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VI. 한국 사회의 공동체주의 결핍과 새로운 모색

1. 한국 사회에서의 공동체 결핍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주의의 결핍', 곧 공공성의 약화이다. 전통적 집단주의 문화는 강했으나, 이는 보편적 공동체 윤리로 성숙하지 못했다. 국가 형성기에는 개인주의를 왜곡하고 집단주의를 강제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현대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공동체 연대와 도덕성은 결여된 기형적 상태에 놓여 있다(김동노 2014, 89-100).

이러한 현상은 '집단 이기주의'로 압축된다. NIMBY 현상, 기득권 카르텔, 혈연·지연·학연 중심의 폐쇄적 내부 연결망이 대표적 사례다. 개인적 이기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가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은 약화되었다. 노동조합, 의료계, 교직원 집단 등 각종 직능단체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투쟁에 집중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고, 자발적 시민 참여 역시 서구에 비해 미흡하며(허철행·허용훈 2007; 정명자·주정아 2021),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공동체 안전망의 취약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마을공동체 운동,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시민적 연대 담론의 활성화는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드러났듯, 한국 사회에는 공동체 의식의 잠재력이 내재해 있다(고동우 2020). 이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상생하는 사회 윤리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켄다카의 현대적 함의를 분석하는 작업은 새로운 사회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다.

2. 켜다카의 실천적 과제 제안

(1) 의무 기반 기부 문화의 확산— 한국의 기부 문화는 두레·품앗이 등 전통적 상호부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의미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아름다운재단(2025) 조사에 따르면, 정기 기부 참여율은 23.0%에 불과하다. 기부를 선택적 선행이 아닌 시민적 의무로 재정의하는 켜다카의 규범적 틀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 봉사와 나눔을 시민의 당연한 역할로 가르치고, 언론·대중문화도 기부를 의무의 실천으로 전달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부단체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적 예우 강화는 이 문화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된다(강철희·주명관 2008).

(2) 기업 사회적 책임(CSR) 강화— 켜다카 정신은 기업 CSR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한국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양극화, 환경 문제, 지역 격차는 기업의 적극적 사회 환원을 요구한다. 기업들은 켜다카적 윤리를 경영이념에 명문화하고, CSR위원회 설치와 사회 환원 조항 도입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 또한 CSR 투자에 비례한 세제 혜택, 공공 입찰 가점, 우수 기업 포상 등 법·정책적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Ismail 2009). 기업이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정의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내면화할 때, 경제와 공동체는 함께 건강해진다.

(3)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한국의 공공복지 지출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OECD 평균(22.1%)의 69% 수준으로 34위에 머물러 있다(이코노미스트 2025).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켰다카적 관점, 즉 수혜자의 존엄과 개별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와 사례관리 강화, 민관 협력 구조 제도화, 관계 복지를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 지역 주도 복지 실험의 확대가 핵심 과제다(김용득 2019). 제도적 체계 위에 인간적 돌봄을 결합하는 것, 그것이 켰다카가 제시하는 복지의 방향이다.

(4) 지역사회 중심 공동체 활성화— 도시화·산업화로 약화된 지역공동체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단위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일상 밀착형 자원봉사 문화 형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역 리더 육성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관 등 지역 기반 기관이 공동체 연대의 거점으로 기능해야 하며(김용득 2019; 2023), 기업·대학의 지역공헌도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자원봉사 경험은 비정기 기부를 정기 기부로 전환하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양용희 2015). 켰다카적 공동체 활성화는 사람이 머물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VII. 결론

본 연구는 유대교 자선 전통인 께다카(Tzedakah)를 현대 철학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함께 고찰하였다. 이제 연구의 주요 논점을 종합하고, 께다카가 현대 민주사회와 한국 사회에 제시하는 윤리적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께다카는 단순한 종교적 자선 행위를 넘어 보편적 사회 윤리로서의 철학적 가치를 지닌다. 히브리어 '께데크(tzedek)', 곧 '정의'에서 유래한 께다카는 나눔을 개인의 선택적 미덕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로 규정한다. 이는 자선을 자발적 감정의 산물로 보는 서구적 charity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께다카의 관점에서 빈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정당히 '돌려받는 것'이며, 부자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나누는 행위를 공의의 실천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께다카의 논리는 권리와 의무,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윤리 체계 안에 통합한다는 점에서, 현대 정치철학이 직면한 핵심 과제에 유효한 응답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그 결과 공동체 연대의 약화와 도덕적 공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선과 연대를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위험을 내포한다. 에치오니(Etzioni)의 반응적 공동체주의와 롤즈(Rawls)의 '겹치는 합의(overlapping consensus)' 개념이 시사하듯, 두 사상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로 재구성될 수 있다. 께다카는 바로 이 접점에 위치한다. 법적 강제 없이 도덕적 의무감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께다카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는 독특한 윤리 기제이다. 이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동체주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경로를 제시한다.

셋째, 께다카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한다. 먼저, 법적 의무 이행만으로 사회적 책임이 충족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공백을 메우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도덕적 동기를 부여한다. 다음으로, 자유시장 경제에서 고착되기 쉬운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윤리적 재분배 문화를 통한 민간 차원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적 제도와 협력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적 경직성으로 인한 공적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수혜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인간적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켄다카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갈등을 완화하는 윤리적 교량으로서, 현대 민주사회의 도덕적 재건을 위한 실천 철학으로 기능할 수 있다.

넷째,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켄다카의 함의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자유화를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롭게 발전하지 못하고 왜곡된 집단 이기주의라는 기형적 형태를 낳았다. 혈연·지연·학연 중심의 폐쇄적 연결망, 직능단체의 이익 극대화 투쟁, NIMBY 현상 등은 모두 진정한 공동체 윤리의 부재를 드러내는 증거들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켄다카가 제시하는 '의무로서의 나눔'과 '정의로운 연대'는 한국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회 윤리의 좌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의무 기반 기부 문화의 확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공동체 활성화의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모든 과제는 켄다카의 핵심 정신, 즉 나눔을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공동체 참여를 의무로 인식하는 윤리적 전환 위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정기 기부 참여율이 23.0%에 그치는 현실(아름다운재단 2025), OECD 최하위권의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켄다카적 가치의 제도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회적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켄다카는 특정 종교 전통의 자선 관행을 넘어 현대 민주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보편적 윤리 철학으로서 재해석될 수 있다. 켄다카가 강조하듯,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구성원 각자의 정의로운 책임 분담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과제이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의무의식과 연대의 실천이 뒷받침될 때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정은 함께 지속될 수 있다. 한국 사회 역시 공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자기실현과 공동체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민 윤리를 확립할 때, 비로소 보다 성숙하고 통합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철희·주명관(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0권 제1호, 1-38.
- 고동우(2020). "코로나19의 제약을 견디는 사람들: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및 자기오락화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제21권 제3호, 399-424.
- 김동노(2014).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와 이론』, 통권 제24집, 89-128.
- 김용득(2019). "지역사회 기반 복지관의 공동체주의 지향성 강화 필요성과 과제: 공공성 담론의 확장과 사회서비스 운영 원리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1권 제4호, 203-233.
- 김용득(2023).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유연성의 개념 변화: 상충에서 조응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4호, 5-27.
- 양용희(2015). "한국사회의 개인기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간연구』, 제30호, 37-60.
- 이범용(2004).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보성에 관한 일고." 『국민윤리연구』, 제56호, 45-78.
- 이원재(2025). "떼다카의 성경적 배경." 『서울대학교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2025년 제2차 세미나 논문집』, 1-10.
- 정명자·주정아(2021). "우리사회의 기부에 대한 인식 고찰: 심층인터뷰를 활용하여." 『인문사회 21』, 제12권 제4호, 513-528.
- 허철행·허용훈(2007). "한국 사회자본의 한계와 전망." 『한국행정논집』, 제19권 제1호, 151-170.

는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현대 철학으로서의 켄다카와 한국 사회의 함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발표자	안승훈
		논찬자 (소속)	이상민 (서울대 불문학교육 박사)

1. 본 논문에 제시된 ‘켄다카’의 개념과 의미 및 실천 원리가 프랑스 사회의 ‘사회연대’ 원리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켄다카’는 ‘정의’, ‘공정성’, ‘자선’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본성, 인간의 도덕성, 공동체적 책임, 구원의 약속을 통합하는 신학적·윤리적 개념입니다. 프랑스 사회의 ‘사회연대’ 원리도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연대’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19세기 말까지 지배적이었던 ‘자선’ 대신에 ‘연대’를 주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구원을 통한 일종의 연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연결로부터 생겨나는 동료 인간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켄다카’가 사회 구조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구체적 방식이라면, 가톨릭교회의 ‘연대’ 정신에 기반한 프랑스의 ‘사회연대’ 원리는 경제적 약자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켄다카’는 단순한 자선이나 기부를 넘어 ‘정의로운 나눔’을 의미하며,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복지에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자선 단체, 비영리 조직,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은 ‘켄다카’가 현대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의 ‘사회연대’ 원리는 그 시대의 모든 개인에게 자신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회연대’ 원리는 가깝든 멀든 수많은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이나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켄다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서 ‘의무로서의 나눔’을 제시하듯이, ‘사회연대’ 원리도 사회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결의를 나타냅니다.

셋째, ‘켄다카’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독특한 윤리 체계로서,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프랑스 사회의 ‘사회연대’ 원리는 사회나 공동체에서 구성원 개인 서로와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강요되는 책임감과 상호의존감을 말합니다. 또 ‘사회연대’ 원리는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 개인이 사회적 위기를 인식한 데서 나온 것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회연대’ 원리를 통해,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 개인이 마주한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며, 개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직접 맞닥뜨린 듯이 행동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사회연대’ 원리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처럼 ‘켄다카’가 현대의 임의적 자선 개념과 달리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적 의무이자 공동체 지속의 필수 조건이듯이, 오늘날 프랑스에서 ‘사회연

대' 원리는 상호 의무의 계약 아래에 있으며,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2. 본 논문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째다카'가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공백을 메우고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째다카'가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법적 의무로 구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사회 전반에 걸친 경쟁 구도의 도입입니다. 신자유주의 이전에는 경쟁 구도가 존재하지 않던 부분까지 경쟁 구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에는 사회 전체를 무한 경쟁의 싸움터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를 통해 무한 경쟁 구도가 도입된 결과, 자유경쟁 시장의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 이윤의 극대화, 공동체주의의 결핍,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안전망의 취약 등의 부정적 결과가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째다카'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들을 해소하고 극복하면서 공동체 연대 강화와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 본 논문에서 한국 사회에서 '째다카'의 실천적 과제로서 의무 기반 기부 문화의 확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공동체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과제가 '째다카'의 핵심 정신, 즉 나눔을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공동체 참여를 의무로 인식하는 윤리적 전환 위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이에 상응하는 법 제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법 제도를 수립하여 정착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3. 논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유대 전통의 윤리 개념이자 유대교 자선 전통인 '째다카'가 지닌 현대적 함의 및 한국 사회에서 '째다카'의 실천적 과제를 살펴보게 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롭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라는 점은 저자가 본 논문을 보강하여 정식 논문으로 학회지에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째다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을 집필한 저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논찬을 마무리합니다.